

協調的 通商協商의 政治經濟學*

李 弘 求**

논문초록

우호적인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보호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무역정책 결정과 통상협상타결의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책목적합수를 극대화하기를 원하고, 기업은 정치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정책을 기업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를 원한다. 이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는 무역정책의 함수가 되며, 정부의 정책은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구할 때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전략적 무역정책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경우 양국 모두 후생이 감소하는 '죄수딜레마' 효과가 유발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는 협조적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유인이 발생한다. 국제통상협상에서는 국내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반영되는데, 각국 산업이 갖는 상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해당 산업의 보호수준이 결정된다. 정치적 영향력은 해당산업의 무역역조가 클수록, 내수산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기술수준(또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산업의 초과이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그 크기가 증대된다. 또 시장접근이나 개방성과 요구와 같은 통상마찰 요인도 통상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해외수출이 국내시장 보호수준과 연결되는 경우는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시장 접근 허용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무역정책결정, 통상협상, 공동대리인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

*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연구과제 '한·미 양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한·미 통상관계의 발전방향'의 일부임. 1998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고려대 박성훈 교수와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I. 무역정책과 통상협상

자유무역이 보편적 현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소득분배문제(요소소득의 변동)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무역의 이익이 보장되는 반면, 계층별, 부문별 실질소득구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별적 이익은 '잠재적'으로만 보장된다. 무역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수단으로서 즉 최소한 생산요소 또는 비교우위가 없는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무역정책수단이 활용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역정책수단이 자유무역의 소득분배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소득이전수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열등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수단이 소득재분배수단으로 동원되는 까닭은 이것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¹⁾

무역정책수단이 채택되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에 의하면, 특정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건이 정책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는 요소소득의 변동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주체가 소유한 생산요소의 구성이나 규모 등이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반응의 크기와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선호를 집단적 선호로 집성하는 과정에서 개별경제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역학관계를 조정하여 이를 집약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예를 들면 투표행위, 압력단체활동, 로비행위 등)이 동원된다.

반면 정책의 공급을 담당하는 정부나 의회는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정치적 지지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정부나 의회는 개인이나 압력단체가 정책공급자의 선호패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때

1) Rodrik (1995) 은 무역정책수단이 소득재분배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며,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Dixit (1996) 는 경제정책결정과정의 정치적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수단으로 무역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정준수에 대한 의무, 국제기구의 압력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 제도와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한적 무역정책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의 창달을 억제하면서 교환과 특화를 통한 무역의 이익 확보 및 시장통합을 통한 범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하여 통상마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한다. 또 국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무역정책은 국제통상관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²⁾ 제2차대전 이후 무역자유화 확대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개별국가의 무역정책을 규율할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제한적 무역정책을 수행할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국가간 무역정책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관세와 같은 무역정책수단은 상대국의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적 무역정책의 결과는 관련된 모든 나라의 후생감소를 의미한다. 즉 일방적으로 시도되는 전략적 행위는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위는 당사자 모두가 손실을 입는 '죄수딜레마' 효과를 유발한다. 국제통상협상은 이와 같이 각국이 일방적으로 '이웃궁핍화'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죄수딜레마'를 회피하고 당사국 모두의 후생수준이 증가되는 보다 나은 균형점에 도달하도록 정책 '협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완벽한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나라도 없지만, 그렇다고 철저한 보호무역을 고수하는 나라도 없다. 국내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보호정책을 채택하기는 하지만 대내외적인 개방압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本稿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무역정책의 결정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 즉 소득재분배수단으로서의 무역정책과 정부간의 전략적 선택을 조율하는 방편으로서의 국제통상협상을 연계하

2) 정부가 국제통상협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의사를 무역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후생수준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국가의 무역정책변화가 자국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무역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압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미 천명한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국제통상협상결과 준수를 구실로 민간부문에 대해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이다. Staiger (1995) 참조.

여 분석함으로써 국제통상협상의 의의를 파악하고 통상마찰³⁾을 회피하는 협조적 국제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적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稿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역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생적 무역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생산요소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本稿에서는 무역정책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반된 입장에 입각해서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협조적 국제통상협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을 정부의 정책효용극대화 측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제시한 분석모형의 현실적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결과가 '정형화'된 사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검증한다. 분석모형의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모형에서 도출한 변수들이 무역정책과 통상협상의 내생성(endogeneity)을 실증분석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분석모형의 기본구조를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내생적 무역정책결정의 맥락에서 기업 및 압력단체가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IV장에서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수행할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효용극대화를 정책목표로 하는 양국 정부가 각국의 후생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 이것이 무역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V장에서는 IV장의 결과를 통상마찰에 적용하여 시장접근 또는 개방성과 요구가 통상협상 균형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분석모형: 기본구조

모형은 세계가 두 나라 즉 본국(home)과 외국(foreign)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에서는 동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 기업들이 조업한다고 가정한다. 두 나라의 시장은 분할되어 있으며, 두 나라의 기업들은 상대방과 자국 시장에서 상호간 쿠르노 경쟁(수량경쟁)을 한다. 즉 기업들은 '상대편 시장 침투

3) 본 모형에서 통상마찰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무역정책 수준(事前的으로 모형에서 결정된 관세수준)과 실제 무역정책수준 즉 事後的 무역정책수준에 괴리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reciprocal market model)에서처럼 경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생산규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무역정책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압력단체를 구성하여 로비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기업들은 소비자와는 달리 '무임승차'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로비')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⁴⁾ 생산자로 구성된 압력단체는 정부가 기업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을 수립해주는 대가로 '정치적 기부금'을 제공한다.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이 각각 자국의 정부에 대해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는 예상관세(또는 예상보호율) τ , τ^* 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압력단체에 속한 기업들은 정치적 기부금을 제외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생산규모를 결정한다.

무역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수입(또는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재분배(또는 공동부담)된다고 가정한다.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직접효용과 소득의 합으로 표시되는 '準線形'(quasi-linear) 또는 '이전가능'(transferable) 효용함수로 나타낸다.

무역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는 경제전체의 후생수준⁵⁾과 '정치적 기부금'의 가중 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개별적으로 제한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정치적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전체에 死重損失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치적 효용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없다.⁶⁾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균형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괴리는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가 상대방 국가 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각국

4) 생산요소별로 압력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압력단체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Grossman and Helpman(1994)이 Ricardo-Viner 모형 속에서 고정생산요소(immobile factors)를 소유한 집단이 로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를 다룬 것처럼 대부분의 내생적 무역정책분석모형에서는 생산요소별로 압력단체를 상정하고 있다.

5) 준선형 효용함수의 경우 경제전체의 후생은 소비자잉여와 기업이윤과 관세수입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내생적 정책결정과 정치경제학적 균형개념에 관해서는 Dixit(1996) 참조.

정부가 경쟁적으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죄수딜레마' 현상뿐만 아니라, 추가적 정치적 거래비용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개별적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을 인식한다면, 비협조적 게임이 유발하는 비효율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의 무역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간에 협상을 통해 무역정책수준을 협조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상대방 정부에 부담이 되는 정치적 거래비용을 회피하고 정치적, 경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 정부는 관세나 보조금 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정책수준 τ , τ^* 를 결정할 때 이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국기업들의 로비행위와 상대방 국가와의 통상협상 결과를 반영한다.

본 모형은 위와 같은 정부와 정부, 정부와 압력단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무역정책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들 무역정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바탕으로 무역정책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모형에서는 무역정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기업들이 정치적 압력(로비)의 효과를 예상해서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결정하고, 본국 정부와 외국정부는 무역정책 즉 각국의 관세율 τ , τ^* 의 수준을 협상하여 결정하면, 이후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규모를 결정한다. 의사결정이 이러한 단계를 거칠 때 단계별 극대화 문제가 부분게임(sub-game) 완전균형 해를 찾기 위해서는 역귀납법(backward induction) 즉 의사결정의 逆順으로 극대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결정, 정책수준결정과 '정치적 기부금' 수준결정의 순서로 문제를 풀어 간다.

Ⅲ. 무역정책과 이윤극대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동시에 공급하는 개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윤함수(기업이윤 Π_i 에서 개별기부금 LC_i 을 뺀 것)는 다음과 같다.

$$\widehat{W}_I - LC_I = (p - c)x + (p^* - (c + \tau^*))x^* - F - \frac{1}{n} LC \quad (1)$$

$$\widehat{W}_I^* - LC_I^* = (p - (c^* + \tau))y + (p^* - c^*)y^* - F^* - \frac{1}{n^*} LC^* \quad (2)$$

여기서 p 와 p^* 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가격, τ , τ^* 는 국내관세율과 해외관세율, x 는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공급규모, y 는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공급규모, x^* 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공급규모, y^* 는 해외기업의 해외시장 공급규모를 나타내며, c 와 F , c^* 와 F^* 는 각각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가변비용과 고정비용, LC , LC^* 는 국내로비단체와 해외로비단체가 자국정부에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 $LC_I = \frac{1}{n} LC$, $LC_I^* = \frac{1}{n^*} LC^*$, n , n^* 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τ , τ^* 와 LC , LC^* 는 생산결정 이전 단계에서 결정되는데, LC , LC^* 가 τ , τ^* 의 함수이므로 이들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극대화 문제를 풀면 결과로 나타난 간접목적함수는 τ , τ^* 의 함수가 된다.

무역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함수는 '정치적 기부금'과 경제전체의 후생을 가중 함으로 표시한 것이다. 즉 본국정부와 외국정부의 정치적 목적함수는 각각 $G = aW + LC$, $G^* = a^*W^* + LC^*$ 로 표시할 수 있는데, 경제전체의 후생과 '정치적 기부금' 모두 무역정책(관세)의 함수이므로 정부가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관세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a , a^* (≥ 1)는 정부가 ('정치적 기부금'과 비교해서) 경제전체의 후생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a , a^* 가 클수록 정부가 '정치적 기부금'보다는 경제전체의 후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W , W^* 는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W = (p - c)nx + (p^* - (c + \tau^*))nx^* - nF + \tau n^*y + U(Q) - pQ \quad (3)$$

$$W^* = (p - (c^* + \tau))n^*y + (p^* - c^*)n^*y^* - n^*F^* + \tau^*nx^* + U^*(Q^*) - p^*Q^* \quad (4)$$

후생함수를 위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사회효용함수를 準線形 선호함수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사회효용함수를 $U(Q) + M$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위의 식에서처럼 후생변동을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재정수입의 변동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⁷⁾ 여기서 사회효용함수와 가격은 $U'(Q) = p$ 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또 국내수요 Q 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공급으로 충당된다. 즉, $Q = nx + n^*y$ 라고 할 수 있으며, n 은 국내기업의 수, x 는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공급규모, n^* 는 해외기업의 수, y 는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공급(수출) 규모를 나타낸다. 또 M 은 국내소득의 크기를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상 수요곡선은 선형함수 형태라고 가정하면 국내역수요함수는 $p = V - Q$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V 는 상수.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 사회효용함수와 가격 및 수요함수는 각각 $U^*(Q^*) + M^*$, $Q^* = nx^* + n^*y^*$, $U^{*'}(Q^*) = p^*$, $p^* = V^* - Q^*$ 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V^* 는 상수, x^* 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공급(수출) 규모, y^* 는 해외기업의 해외시장 공급규모를 나타낸다.

정부는 관세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시장가격과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를 통해 '정치적 기부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관세수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한편 압력단체는 '정치적 기부금'의 한계변화와 이러한 로비의 결과 나타난 정책의 변화가 압력단체의 한계이익(기업의 純利潤變動의 합)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정부에 제공할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결정한다.⁸⁾ 이렇게 결정된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는 Bernheim-Whinston-Grossman-Helpman이 정의한 '진정한 내쉬 균형'값⁹⁾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내쉬 균형'에서 압력단체는 정책변화로 얻게 된 이익(후생수준)과 압력단체가 준거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익(후생수준)과의 차이만큼을 정부에 '정치적 기부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진정한 내쉬 균형' 기부금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국내압력단체의 경우

$$LC^T(p, B) = \max[0, n\widehat{W}_T(p) - B] \quad (5)$$

여기서 p 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 B 는 기준이 되는 후생수준을 의미하며, T 는 '진정한' 균형을 의미한다. 해외압력단체의 경우도 유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7) 관련 내용은 Brander(1995)의 서베이 참조.

8) 즉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이 되도록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유도

과정은 Grossman and Helpman(1994) 참조.

9) '진정한 내쉬 균형' 개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Grossman and Helpman(1994) 참조.

또 Grossman and Helpman (1994)에 의하면 위의 식을 만족하는 ‘진정한 내쉬균형’ 가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즉

$$p^0 = \arg \max_{p \in P} [n \widehat{W}_I(p) + aW(p)] \quad (6)$$

이 식의 의미는 ‘진정한 내쉬균형’ 기부금은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목적함수를 극대화할 때 압력단체(산업)는 $(1+a)$ 의 가중치를 갖고, 소비자는 a 의 가중치를 갖는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무역정책 즉 p^0 값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¹⁰⁾

‘진정한 내쉬균형’ 기부금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정치적 기부금’을 제공하는 압력단체가 얻는 순이익은 B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 압력단체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범위 내에서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순이익 B 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단체는 압력단체를 조직하나, 소비자는 이에 대응해서 압력단체를 조직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한다.¹¹⁾ 반면 정부는 p^0 와 p^-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p^0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력단체의 ‘정치적 기부금’이 있는 경우 압력단체의 후생이 포함된 정치적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정책변수의 값이며, p^- 는 압력단체의 ‘정치적 기부금’이 없는 경우 압력단체의 후생이 무시된 정부의 정치적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정책변수의 값을 의미한다. 이때 어떤 압력단체가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순이익 B 의 최대한계는 얼마나 될 것인가? B 의

10) (증명: Grossman-Helpman)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LC^0(p^0) + aW(p^0) \geq LC^0(p) + aW(p)$ for $p \in P$ 가 성립한다. 여기서 $LC^T(p, B) = \max [0, n \widehat{W}_I(p) - B]$ 이므로, $LC^0(p^0) = n \widehat{W}_I(p^0) - B^0$. 또 ‘진정한 정치적 기부금’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LC^0(p) \geq n \widehat{W}_I(p) - B^0$ for $p \in P$. 처음 부등식에 이들을 대입하면 $n \widehat{W}_I(p^0) + aW(p^0) \geq n \widehat{W}_I(p) + aW(p)$ for $p \in P$ 가 성립한다. Q. E. D. Grossman and Helpman (1994).

11)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는 생산자단체보다 덜 조직적이고, 전문성이나 정보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더욱이 무역정책의 변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소비자 전체의 경우 매우 크지만 불특정다수가 이익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개별적 이익의 크기는 크지 않다. 반면, 전체적 이익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생산자 단체는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집단행동의 비용이 클수록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최대한계는 이 압력단체가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최소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부가 이 압력단체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정치적 기부금' 규모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줄어든 이 압력단체의 '정치적 기부금'을 무시하고 더이상 이 압력단체가 바라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게 될 때까지 정치적 기부금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이 경우 '진정한 내쉬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기부금' 함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자신의 효용(목적함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p^0 와 p^- 중 어떤 것도 선호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는 식, $aW(p^-) = LC^T(p^0) + aW(p^0)$ 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p^- = \arg \max_{p \in P} aW(p)$ 이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내쉬균형'의 의미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정치적 기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우(p^-)와 '정치적 기부금'과 사회후생의 합을 극대화하는 경우(p^0)가 서로 무차별적이 될 때까지 압력단체가 B 의 값을 상승(즉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식에서 '정치적 기부금' 함수를 유도하면 $LC^T(p^0) = aW(p^-) - aW(p^0)$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회후생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 p^- 는 자유무역이고, 사회후생과 '정치적 기부금'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p^0 이다. 이때 압력단체가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 $aW(p^-) - aW(p^0)$ 는 자유무역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특정 압력단체를 의식한 무역정책이 사회전체에 유발하는 후생손실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치적 기부금' 함수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목적함수에 대입하면 개별기업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begin{aligned} \widehat{W}_I - LC_I &= (p - c)x + (p^* - (c + \tau^*))x^* - F \\ &\quad - \frac{1}{n} a \{ W(p^F, p^{*F}) - W(p, p^*) \} \end{aligned} \quad (7)$$

$$\begin{aligned} \widehat{W}_I^* - LC_I^* &= (p - (c^* + \tau))y + (p^* - c^*)y^* - F^* \\ &\quad - \frac{1}{n^*} a^* \{ W^*(p^F, p^{*F}) - W^*(p, p^*) \} \end{aligned} \quad (8)$$

12) 자세한 내용은 Grossman and Helpman(1994) 참조.

여기서 $W_I = \widehat{W}_I - LC_I$, $W_I^* = \widehat{W}_I^* - LC_I^*$ 라고 한다면 이윤극대화 一階條件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partial W_I}{\partial x} = xp' + p - c - a(-p + c + \frac{n^*}{n} yp') \leq 0 \quad (9)$$

$$\frac{\partial W_I^*}{\partial y} = yp' + p - c^* - \tau \leq 0 \quad (10)$$

$$\frac{\partial W_I}{\partial x^*} = x^*p^{**} + p^* - c - \tau^* \leq 0 \quad (11)$$

$$\frac{\partial W_I^*}{\partial y^*} = y^*p^{**} + p^* - c^* - a^*(-p^* + c^* + \frac{n}{n^*} x^*p^{**}) \leq 0 \quad (12)$$

양방향무역 (intra-industry trade) 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각각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상대방 시장에도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위의 부등호는 모두 등호로 바뀐다. 또 수요함수가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은 경우 이윤극대화 二階條件은 충족된다. 따라서 一階條件들을 x , y , x^* , y^* 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은 解를 구할 수 있다.

$$x = -\frac{1}{p'} \left\{ (1+a)(p-c) - a\frac{n^*}{n}(p-c^*-\tau) \right\} \quad (13)$$

$$y = -\frac{1}{p'} (p-c^*-\tau) \quad (14)$$

$$x^* = -\frac{1}{p^{**}} (p^*-c-\tau^*) \quad (15)$$

$$y^* = -\frac{1}{p^{**}} \left\{ (1+a^*)(p^*-c^*) - a^*\frac{n}{n^*}(p^*-c-\tau^*) \right\} \quad (1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역수요함수가 앞에서 가정한 것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 $p' = p^{**} = -1$ 이므로, x , y , x^* , y^* 를 다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이윤함수에 대입하면 개별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widehat{W}_I - LC_I &= (1+a)(p-c)^2 + (p^*-c-\tau^*)^2 \\ &\quad - a\frac{n^*}{n}(p-c)(p-c^*-\tau) - F \end{aligned} \quad (17)$$

$$\begin{aligned}\widehat{W}_I^* - LC_I^* &= (p - c^* - \tau)^2 + (1 + a^*)(p^* - c^*)^2 \\ &\quad - a^* \frac{n}{n^*} (p^* - c^*)(p^* - c - \tau) - F^*\end{aligned}\quad (18)$$

만약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서의 進入과 退出이 자유롭다고 한다면, 진입과 퇴출로 인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순이윤은 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기업의 수는 $W_I = \widehat{W}_I - LC_I = 0$, $W_I^* = \widehat{W}_I^* - LC_I^* = 0$ 이 동시에 성립되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간접)이윤함수는 국내시장가격과 해외시장가격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들을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표시한 도형에서 零利潤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³⁾

$$\left. \frac{dp^*}{dp} \right|_{W_I} = - \frac{(1+a)(2p-2c) - a \frac{n}{n^*} (2p-c-c^*-\tau)}{2(p^*-c-\tau^*)} \quad (19)$$

$$\left. \frac{dp^*}{dp} \right|_{W_I^*} = - \frac{2(p-c^*-\tau)}{(1+a^*)(2p^*-2c^*) - a^* \frac{n}{n^*} (2p^*-c^*-c-\tau^*)} \quad (20)$$

여기서 이들 이윤함수는 陰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이 경우 W_I 의 기울기가 W_I^* 의 기울기보다 급하다고 (절대값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¹⁵⁾

13) 여기서 기업의 생산규모가 가격의 함수로 표시되었지만, 개별기업은 여전히 다른 기업의 생산규모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자신의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쿠르노 경쟁을 한다. 쿠르노 경쟁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Wong(1995) 12장을 따랐다.

14) 두 함수가 모두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이다.

$$\begin{aligned}(p-c) &> \frac{a}{1+a} \frac{n}{n^*} (p - \frac{c+c^*+\tau}{2}) \\ (p^*-c^*) &> \frac{a^*}{1+a^*} \frac{n}{n^*} (p^* - \frac{c^*+c+\tau^*}{2})\end{aligned}$$

그런데 여기서 a , a^* 의 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간 단위 생산비의 차이, 관세의 산업보호(비용우위확보) 효과, n , n^* 값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경우 위의 두 부등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두 함수가 모두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 모든 기업의 자국시장공급은 陽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결과를 정리하면, 무역정책의 변화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만약 본국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τ 의 값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W_I^* 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나, W_I 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¹⁶⁾ 이때 $W_I = 0$, $W_I^* = 0$ 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p , p^* 의 값은 τ 값의 상승으로 이동하게 된 W_I , W_I^* 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균형점에서 새로운 p 의 값은 하락하고, p^* 의 값은 상승한다. 따라서 관세 상승은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Metzler 패러독스를 유발한다. 그러나 관세의 산업보호효과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면 초과이윤이 쪼이 될 것이므로, 국내 경제전체의 후생은 $W = \tau n^* y + U(Q) - pQ$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τ 가 증가할 때 p 가 하락하면 W 의 값은 상승한다. 따라서 일방적 관세부과가 가능한 경우 본국정부의 입장에서 陽의 값을 갖는 최적관세를 부과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외국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 τ^* 를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W_I 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나, W_I^* 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된다.¹⁸⁾ 따라서 새로운 p 의 값은 상승하고, p^* 의 값은 하락한다. 외국정부의 관세정책 변

15) 여기서 각주 14)의 가정이 성립한다면,

i) $p = 0$ 인 경우

$$W_I = (1+a)c^2 + (p^* - c - \tau^*)^2 - a \frac{n^*}{n} (-c)(-c^* - \tau) - F \quad (a)$$

$$W_I^* = (c^* + \tau)^2 + (1+a^*)(p^* - c^*)^2 - a^* \frac{n}{n^*} (p^* - c^*)(p^* - c - \tau^*) - F^* \quad (b)$$

ii) $p^* = 0$ 인 경우

$$W_I = (1+a)(p-c)^2 + (c+\tau^*)^2 - a \frac{n^*}{n} (p-c)(p-c^* - \tau) - F \quad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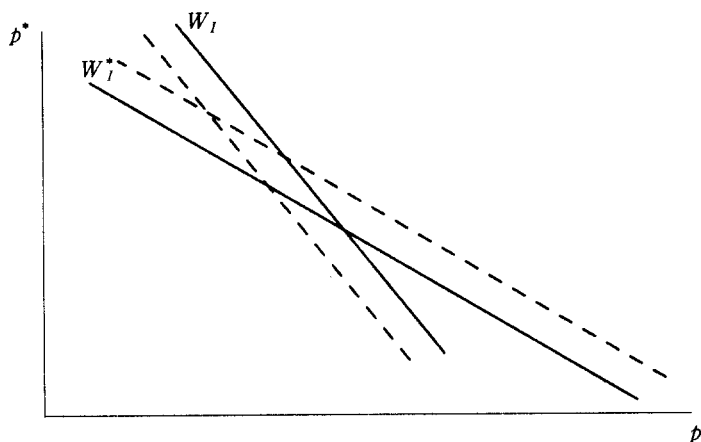
$$W_I^* = (p-c^* - \tau)^2 + (1+a^*)(-c^*)^2 - a^* \frac{n}{n^*} (-c^*)(-c - \tau^*) - F^* \quad (d)$$

로 나타낼 수 있는데 (a) > (b), (c) < (d)이 성립하므로 본문에서처럼 가정해도 무방할 듯하다.

$$16) \text{ 각주 15)와 같은 조건에서는 } \left. \frac{dp}{d\tau} \right|_{W_I} = - \frac{a \frac{n^*}{n} (p-c)}{2(1+a)(p-c) - a \frac{n}{n^*} (2p-c-c^*-\tau)} < 0$$

이 성립하므로, W_I 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17) 일방적 관세부과(상대방의 보복이 없는)는 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상대방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관세 (τ 값 상승) 효과

화로 τ^* 가 상승할 때 p^* 가 하락하면, $W^* = \tau^* n x^* + U^*(Q^*) - p^* Q^*$ 의 값은 상승한다. 따라서 일방적 관세부과가 가능한 경우 외국정부의 입장에서라도 陽의 값을 갖는 최적관세를 부과할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본국정부와 외국정부가 동시에 같은 정도로 관세장벽을 강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 p , p^* 의 위치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앞에서 가정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이 국내시장 가격과 해외시장 가격은 동시에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양국 정부의 동시적 전략적 정책결정은 두 나라 경제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죄수딜레마'를 유발한다. 이 경우 '죄수딜레마'를 회피하고, 양국 모두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정'(coordinated)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 수단이 되는 협조적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유인이 발생한다.

$$18) \text{ 각주 15)와 같은 경우 } \left. \frac{dp^*}{d\tau^*} \right|_{w_i} = - \frac{a^* \frac{n}{n^*} (p^* - c^*)}{2(1 + a^*)(p^* - c^*) - a^* \frac{n}{n^*} (2p^* - c^* - c - \tau^*)} < 0$$

이 성립하므로, W_I^* 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IV. 통상협상과 정치적 효용극대화

압력단체에 속한 기업이 이윤극대화에 부합되는 '정치적 기부금' 수준을 결정하고, 또 정부가 정치적 효용극대화에 부합되는 정책수준을 결정할 때 압력단체나 정부는 이렇게 결정된 τ , τ^* 가 다음 단계에서 기업의 생산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자신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한다. 그런데 각국 정부가 비협조적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무역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대해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정부가 경제전체의 후생과 압력단체가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관세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후생만을 고려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국의 압력단체에게 유리한 정책은 상대방 국가 압력단체의 회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 관세정책은 경제전체의 후생만을 고려하는 '최적관세'의 경우보다 '강도'가 더 큰 '무역전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⁹⁾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것은 양국 정부 모두 다 잘 인식하게 마련이다. 이들은 무역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과 통상협상을 통해서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통상마찰에 따르는 비용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는 각각 자신의 정치적 효용은 극대화하고, 통상마찰비용은 극소화할 목적으로 국제통상협상에 임할 것이다. 또 양국은 협상타결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전지출'(side-payments) R (또는 R^*)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정치적 목적함수는 $G = a(W - R) + LC$, $G^* = a^*(W^* + R) + LC^*$ 로 변형된다.

한편 각국의 기업들로 구성된 양국의 압력단체는 '정치적 기부금'을 제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갖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 기부금'의 수준을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W_{PG} = (p - c)nx + (p^* - (c + \tau^*))nx^* - nF \quad (21)$$

$$W_{PG}^* = (p - (c^* + \tau))n^*y + (p^* - c^*)n^*y^* - n^*F^* \quad (22)$$

19) 최적관세(optimal tariff)보다 더 무역을 제한하는 관세율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 Grossman and Helpman(1995) 참조.

이들은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결정할 때 자국의 정부가 상대방 정부와 협상에 임해서 압력단체의 최적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자국정부의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τ , τ^* 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각국 정부가 사전적으로 기대하는 기부금의 크기와 경제전체의 후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적정책을 선택하도록 압력단체들의 '정치적 기부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협상의 결과로 도출되는 무역정책은 'Pareto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균형상태에서는 G , G^* 가 동시에 개선될 수 없다. 즉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협조적 협상의 균형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협조하여 자신들의 개별 목적함수를 결합시킨 '통합목적함수' $a^*G + aG^*$ 를 극대화시키는 무역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가상의 '세계정부'가 있어 '통합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즉 '통합목적함수'를 정치적 효용함수로 하는 '공동대리인'(common agency)이 있고, 이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정책변수 τ , τ^* 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공동대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압력단체가 있을 때 이들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조건을 구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통합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국제규범(무역협정)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 중재자가 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통상협상문제는 일종의 '공동대리인'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 문제의 解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 Bernheim-Whinston-Grossman-Helpman의 효율성 정리²⁰⁾

- i) 국제통상협상 균형조건은 '정치적 기부금' LC , LC^* 와 무역정책수단 τ , τ^* 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함수의 합을 극대화한다. 이 조건은 통상협상 균형조건이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ii) 조건 i)을 만족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다른 과점적 기업(압력단체소속)의 '정치적 기부금'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한 과점기업의 기업후생을 개선하면서 조건 i)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기부금' 함수와는 다른 '정치적 기부금'

20) 구체적인 내용은 Grossman and Helpman(1994, 1995) 참조.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압력단체가 '정치적 기부금'의 크기를 바꾸어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조건은 양국 기업과 압력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공동대리인' 문제로 전환시킨 국제통상협상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통상협상균형조건은 효율성 정리를 충족시키는 τ , τ^* 와 LC , LC^* 로 구성되는데, 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들 변수들은 '통합목적함수'($a^*G + aG^*$)를 극대화하고, 국내압력단체의 후생을 극대화 즉 $W_{PG}(\tau, \tau^*) - LC(\tau, \tau^*) \geq W_{PG}(t, t^*) - LC(t, t^*)$ 이 성립하도록 한다. 여기서 t , t^* 는 임의의 값. 물론 외국의 경우도 직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τ , τ^* 는 국내와 해외의 압력단체의 효용과 '공동대리인'의 '통합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tau, \tau^*) = \arg \max a^*(W_{PG} - LC) + a^*G + aG^* \quad (23)$$

$$(\tau, \tau^*) = \arg \max a(W_{PG}^* - LC^*) + aG^* + a^*G \quad (24)$$

그런데 이와 같은 τ , τ^* 는 당연히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의 조건²¹⁾을 충족시키므로, 따라서 위 식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내쉬균형' τ , τ^* 의 값은 다음의 一階條件에서 구할 수 있다. 즉 '진정한 내쉬균형' 정책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 \left(\frac{\partial W_{PG}}{\partial \tau} + a \frac{\partial W}{\partial \tau} \right) + a \left(\frac{\partial W_{PG}^*}{\partial \tau} + a^* \frac{\partial W^*}{\partial \tau} \right) = 0 \quad (25)$$

$$a^* \left(\frac{\partial W_{PG}}{\partial \tau^*} + a \frac{\partial W}{\partial \tau^*} \right) + a \left(\frac{\partial W_{PG}^*}{\partial \tau^*} + a^* \frac{\partial W^*}{\partial \tau^*} \right) = 0 \quad (26)$$

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τ , τ^* 값을 구하면 된다. 여기서 一階條件을 구성하는 偏導

21) '공동대리인'의 '통합목적함수'가 개별적으로도 극대화되어야 하므로, 이 극대화조건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partial LC^*}{\partial \tau^*}$ 의 조건이 충족된다.

函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 n}{n + n^* + 1} (x + p - c) \quad (27)$$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n+1)}{n + n^* + 1} (y + p - c^* - \tau) \quad (28)$$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quad (29)$$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 n^*}{n + n^* + 1} (y^* + p^* - c^*) \quad (30)$$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y + p - c - \tau) - \frac{n^*(p-c)}{n + n^* + 1} \quad (31)$$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y + p - c^* - \tau) \quad (32)$$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quad (33)$$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 \frac{n(p^*-c^*)}{n + n^* + 1} \quad (34)$$

위의 편도함수들을 一階條件에 대입하여 τ , τ^* 에 대해 정리하면, 협조적 무역정책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tau = & \frac{1}{-a} \{ -ay + a^*x + p(a^* - a) - (a^*c - ac^*) + aa^*(c^* - c) \} \\ & + \frac{1}{(n+1)a} \{ a^*(a+1)(p-c) + a^*x \} \end{aligned} \quad (35)$$

$$\begin{aligned} \tau^* = & \frac{1}{-a^*} \{ -a^*x^* + ay^* + p^*(a - a^*) - (ac^* - a^*c) + aa^*(c - c^*) \} \\ & + \frac{1}{(n^*+1)a^*} \{ a(a^*+1)(p^*-c^*) + ay^* \} \end{aligned} \quad (36)$$

자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국제통상협상의 결과 유도된 τ , τ^* 를 여러 변수들에 대해 비교정태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우선 τ , τ^* 는 상대방기업의 수입시장 침투율이 클수록(각각 y , x^* 가 클수록), 자국기업의 생산비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각각 $(c^* - c)$, $(c - c^*)$ 가 작을수록), 자국산업의 이윤율이 클수록(각각 $(p - c)$, $(p^* - c^*)$ 가 클수록) 그 크기가 증가한다. 반면

τ , τ^* 는 자국기업이 공급하는 자국시장의 크기가 클수록(각각 x , y^* 가 클수록), 자국시장의 국내가격이 낮을수록(각각 p , p^* 가 작을수록), 또 자국기업의 수가 많을수록(각각 n , n^* 가 클수록) 그 크기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관세의 산업보호효과를 감안한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약할수록, 그리고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잠재적 독점이윤의 크기가 클수록 적극적 무역정책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장구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한 경쟁적 시장구조에 가까워질 경우 독점이윤의 발생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작게 하는 소극적 무역정책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몇 가지 가정하에 (τ , τ^*) 값을 구하면 실증적 검증과 해석에 보다 편리한 형태로 재정리할 수 있다.

■ 대칭성 가정

- i) 양국정부가 사회후생의 중요성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가정한다. 즉 $a = a^*(\equiv \gamma)$ 라고 가정한다.
- ii) 과점적 기업의 個數가 양국간에 서로 차이가 없고, 시장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n = n^*$ 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대칭성 가정을 가하면 통상협상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begin{aligned} \tau - \tau^* &= \frac{1}{\beta} \{ \beta(y - x^*) + \gamma(x - y^*) + (\gamma^2 + 2\gamma)(c^* - c) \} \\ &\quad - \frac{\mu}{\beta} \{ \gamma(\gamma + 1) [(p - c) - (p^* - c^*)] + \gamma(x - y^*) \} \\ &= (y - x^*) - (1 - \mu)(x - y^*) - (\gamma + 2)(c^* - c) \\ &\quad + \mu \{ (\gamma + 1) [(p - c) - (p^* - c^*)] \} \end{aligned} \quad (37)$$

여기서 $\beta = -a = -a^* < 0$, $\mu = \frac{1}{n+1} = \frac{1}{n^*+1} < 1$ 을 의미한다.

위의 식은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준의 관세정책을 수행하는가를 보여주는 무역정책의 상대적 적극성을 나타낸다. 이 식에 의하면 국제통상협상은 결국 자국내 정치

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산업(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이 각각 자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산업보호의 크기와 이윤의 크기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비교정태분석을 해보면 정치적 영향력은 해당산업의 무역역조가 클수록($y-x^*$ 가 클수록), 내수산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x-y^*$ 가 작을수록), 기술수준(또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c^*-c 가 작을수록), 그리고 산업의 초과이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p-c)-(p^*-c^*)$ 가 클수록) 그 크기가 증대된다. 정치적 영향력이란 결국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얼마만큼 수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입지'가 열악할수록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며, 또 산업보호를 관철하기 위한 산업의 정치적 압력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Grossman and Helpman(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통상협상의 결과 수반되는 비효율은 정치적 영향력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산업(기업전체)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통상협상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

- i) 무역협상 균형상태에서는 무역수지적자가 큰 나라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 교역상대국에 대해 적극적인 관세(무역장벽)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협조적 통상협정의 균형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ii) 국내시장규모가 해외시장보다 큰 경우 교역상대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후생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관세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이다. 또 관세인하의 결과 회복할 수 있는 후생손실(사중손실에 의한 후생감소의 크기)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관세인상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이다.²²⁾

22) 소비자잉여함수의 모양이 가격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로 하락하는 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경우)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 Vousden (1990) 8장 참조.

- iii) 비용우위에 있는 국가가 비용우위를 상실한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세의 비용우위 제고효과가 교역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이다.
- iv) 기업의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교역상대국보다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유인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 v) 그런데 iv)가 시사하는 바는 iii)의 시사점과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용우위가 있고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iv)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iii)과 iv) 중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가는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한 관세율이 일방적인 최적관세율보다 나은 점 두 가지가 잘 알려져 있다. 첫째, 협조적 균형관세는 최적관세가 유발하는 '최수덜레마'를 제거한다는 것과, 둘째 최적관세가 유발하는 범세계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즉 사중손실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협상을 통해 도출한 협조적 균형관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는 관계없이, 최적관세 대신 협조적 균형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게 된 후생증가분(조세수입)을 두 나라 정부사이에 분배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제통상협상의 결과로 도출한 협조적 균형관세 τ , τ^* 는 앞에서 언급한 '통합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값으로 이때 '통합목적함수'의 극대값은 $a^*G + aG^* = \bar{G}$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합목적함수'를 극대화한 후에는 이 극대값을 만족시키는 G , G^* 를 결정하는 '협상'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 '통합목적함수'의 극대값이 클수록, 통상협상에 실패했을 경우의 후생수준이 클수록, 협상 실패의 부담이 작을수록 해당 정부의 협상력이 커지고 협상결과로 얻을 수 있는 후생수준도 증가한다.²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상협상 결렬은 협조적 균형관세 부과

23) Grossman and Helpman (1995)은 연속적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에 실패할 확률과 재할인을 (협상실패로 협상타결이 연기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재할인하는 비율)이 두 나라 모두 같은 경우 $a^*G + aG^* = \bar{G}$ 를 만족하는 두 나라의 정부의 후생수준 (G , G^*)는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즉 $G = \frac{1}{2} \left[\frac{1}{a} \bar{G} + G_N - \frac{a}{a^*} G_N^* \right]$, $G^* = \frac{1}{2} \left[\frac{1}{a} \bar{G} + G_N^* - \frac{a^*}{a} G_N \right]$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G_N , G_N^* 는 본국정부와 외국정부가 협상에 실패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후생수준을 의미한다.

에 따르는 후생증가분을 두 나라 사이에 분배하는 문제에 합의하는 데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V. 통상마찰: 시장접근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예로 들면 한·미 통상마찰은 1970년대 초 미국의 한국산 제품수입의 수량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제한조치에서 비롯되어, 1970년대 말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간접적인 수입제한조치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정책이 수입제한보다는 공정무역개념에 기초한 호혜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최근의 통상마찰은 주로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의 형태로 나타난다.²⁴⁾ 이와 같이 통상마찰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정책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국상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에서는 통상마찰이 시장개방압력 또는 시장접근에 대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본고의 분석방법을 적용시킬 때 당사국들의 균형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본다.

개방압력 요구조건을 제약요인으로 모형에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정부가 본국정부에 대해 개방성으로 $n^*y = \alpha nx^*$, $\alpha \leq 1$ 즉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규모의 일정비율만큼 국내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외국정부의 이와 같은 개방성과 또는 시장접근 요구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생산 및 공급규모 결정과 관련해서 이들 변수의 자유도를 감소시킨다. 개방성과 관련된 제약조건으로 인해 x , x^* , y^* 값만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개방성과 제약조건을 모형에 투입하면, 국내관세 증가가 유발하는 외국 압력단체의 효용변화 $\left(\frac{\partial W_{FC}^*}{\partial \tau}\right)$, 국내 경제전체의 효용변화 $\left(\frac{\partial W}{\partial \tau}\right)$ 와 외국 경제전체의 효용변화 $\left(\frac{\partial W^*}{\partial \tau}\right)$ 등은 개방성과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와는 다른 편도함수 값을 갖게 된다. 즉 一階條件에 투입되는 편도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4) 왕윤종, 나수엽(1997) 참조.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 n}{n + n^* + 1} (x + p - c) \quad (38)$$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n+1)}{n + n^* + 1} \left(-\frac{n}{n^*} ax^* + p - c^* - \tau \right) \quad (39)$$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quad (40)$$

$$\frac{\partial W_{PG}^*}{\partial \tau^*} = \frac{n n^*}{n + n^* + 1} (y^* + p^* - c^*) \quad (41)$$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left(-\frac{n}{n^*} ax^* + p - c - \tau \right) - \frac{n^*(p-c)}{n + n^* + 1} \quad (42)$$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left(-\frac{n}{n^*} ax^* + p - c^* - \tau \right) \quad (43)$$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quad (44)$$

$$\frac{\partial W^*}{\partial \tau^*} = \frac{n(n^*+1)}{n + n^* + 1} (x^* + p^* - c^* - \tau^*) - \frac{n(p^*-c^*)}{n + n^* + 1} \quad (45)$$

이 경우 一階條件을 τ , τ^*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begin{aligned} \bar{\tau} = & \frac{1}{-a} \left\{ -a \frac{n}{n^*} ax^* + a^* x + p(a^* - a) - (a^* c - ac^*) + aa^*(c^* - c) \right\} \\ & + \frac{1}{a(n+1)} \{ a^*(a+1)(p-c) + a^* x \} \end{aligned} \quad (46)$$

$$\begin{aligned} \bar{\tau}^* = & \frac{1}{-a^*} \{ -a^* x^* + ay^* + p^*(a - a^*) - (ac^* - a^* c) + aa^*(c - c^*) \} \\ & + \frac{1}{a^*(n^*+1)} \{ a(a^*+1)(p^*-c^*) + ay^* \} \end{aligned} \quad (47)$$

또 시장접근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칭성 가정을 하면 국제통상협상 균형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bar{\tau} - \bar{\tau}^* = & (a-1)x^* - (1-\mu)(x-y^*) - (\gamma+2)(c^*-c) \\ & + \mu\{(\gamma+1)[(p-c)-(p^*-c^*)]\} \end{aligned} \quad (48)$$

시장접근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시사점은 시장 접근 제약조건이 있는 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이 많을수록 국내관세를

을 해외관세율에 근접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접근 제약조건은 $\alpha \leq 1$ 인 변수이므로 국내관세율과 해외관세율의 격차는 외국정부의 본국정부에 대한 시장접근 요구에 대한 압력이 강할수록 ($\alpha \rightarrow 1$) 줄어든다. 즉 해외시장 수출에 대한 우려가 관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자동차 시장접근과 관련된 협상과정을 잘 설명한다. 1994년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관심분야로 지정하였고, 양국간 협의를 거쳐 1995년 9월 양자간 자동차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의 자동차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를 요구하였고, 한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1995년 자동차 수입세를 종전 10%에서 8%로 인하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후 협상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실행관세율이 EU나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결국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협상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관세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거나, 배기량 기준과세제도 등을 한국만이 부당하게 고집한다거나, 또 다른 비관세장벽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한국의 관세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접근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⁵⁾

25) 그 이유는 관세가 공급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정확적으로 구해보면 잘 알 수 있다. 관세가 공급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윤극대화의 1차조건으로부터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frac{dx}{dr} = \frac{n^*}{n + n^* + 1}, \quad \frac{dx^*}{dr} = -\frac{n^*(n+1)}{\alpha n(n+1)}$$

$$\frac{dy^*}{dr^*} = \frac{n}{n + n^* + 1}, \quad \frac{dx^*}{dr^*} = -\frac{n^* + 1}{n + n^* + 1}$$

따라서 국내관세율이 상승하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관세부과로 외국기업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수입과 연계되어 있는 해외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VI. 결 론

본고에서는 우호적인 국제통상협상을 통해 무역정책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무역정책결정과 통상협상타결의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무역정책을 수립 결정하는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전체의 후생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정책목적합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기업은 무역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며 이를 위해서 압력단체를 통한 로비행위를 하고, 그 결과 무역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라 생산 및 수출규모를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무역정책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전략적 무역정책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유도한다. 그러나 양국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동시적 전략적 무역정책 효과가 나타날 경우 두 나라 모두 후생이 감소하는 '죄수딜레마' 효과가 유발된다. 따라서 '죄수딜레마' 효과를 회피하고 양국 모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는 조정된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한 국제통상협상의 유인이 발생한다.

물론 정부가 국제통상협상에 나설 때에는 압력단체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제통상협상은 자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산업(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각국 산업의 상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해당 산업의 보호수준이 결정되는데, 해당산업의 무역역조가 클수록, 내수산업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기술수준(또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그리고 산업의 초과이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가 증대된다.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할수록 산업보호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며,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단순한 분석모형과 대칭성 가정을 활용하여 협조적 통상협상의 균형조건으로 통상협상당사국의 보호수준을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에 투입이 가능한 변수들 즉 무역수지, 시장규모, 생산비조건, 이윤수준 등이 보호수준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서 本稿의 분석은 시장접근이나 개방성과 요구조건과 같은 통상마찰 요인이 있는 경우 이것이 통상협상 균형관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本稿의 모형에서는 해외수출이 국내시

장 보호수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시장접근 및 개방성과 역시 보호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本稿의 분석에서는 이론적 가능성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와 관련된 해석의 타당성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아야만 할 것인데, 이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무역협상과정을 모형에 도입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이것은 본고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參考文獻

1. 왕윤종·나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2. Brander, J. A., "Strategic Trade Policy", in Gene M. Grossman and Kenneth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1995, pp. 1395~1455.
3. Dixit, A. K., *The Making of Economic Policy: A Transaction-Cost Politics Perspective*, Cambridge: MIT Press, 1996.
4. Grossman, G. M. and E. Helpman,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4, September 1994, pp. 833~849.
5. ———, "Trade Wars and Trade Talk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3, No. 4, August 1995, pp. 675~708.
6. Rodrik, D.,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in Gene M. Grossman and Kenneth Rogoff(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1995, pp. 1457~1494.
7. Staiger, R. W., "International Rules and Institutions for Trade Policy", in Gene M. Grossman and Kenneth Rogoff(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Amsterdam: Elsevier Science B. V., 1995, pp. 1495~1551.
8. Vousden, N., *The Economics of Trade Prote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 Wong, Kar-yiu,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Factor Mobility*, Cambridge: MIT Press, 1995.